

# 李 리스크·당권 신경전 국민의힘 '혼란 속으로'

### 가처분 국면 장기화·탄원서 유출 파문... 당권 주자들, 전대 시기 신경전

국민의힘이 깊어지는 '이준석 리스크'에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겹치면서 점점 더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막 비상대책위원회가 닳을 올리고 수습과 혁신 행보에 돌입했지만, 자칫 인화성 높은 가처분 및 당권 투쟁 이슈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24일로 벌써 2주째를 맞았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 주 이후 결정"을 예고하면서 자칫 결정시점이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가처분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에 적잖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법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빨리 (판단) 해주는 게 상례"라면서 "아무튼 여러 쟁점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그럴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외에서 고강도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전 대표 측과 당내 반발이 충돌하면서 연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고 경찰 수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탄원서가 전날 공개되면서 당 안팎의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호재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이 전 대표에 대해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했고, 이 전 대표와 가까웠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고 충고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측에서는 탄원서 유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가 이해적인 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뿔었다느니 등등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 와중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득실과 직결된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이 좀 더 삭감되니까 그걸 제대로 야당에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 처리를 마친 다음 12월 중순에 전대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에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면서 "대략 국감만 마치고 나면 전대 준비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기 전대를 거듭 강조했다. 올해 국감은 10월24일에 종료된다.

애초 전대 시기로 내년 1월 말-2월 초를 주장했던 주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대 날짜나 비대위 지속 기간은 당에서 비대위원들이나 당원들 뜻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한발 뒤로 물러난 모습이다.

이에 25일부터 1박2일 동안 열리는 연찬회에서 전대 개최 시기 등 당내 현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박찬대 vs 송갑석... 친명-비명 최고위원 경쟁 치열

### 싸움이 노리는 친명, 박찬대 집중 지원... 송갑석 '지지선언' 등에 업고 역전 노력

민주당 전대 최종전인 서울-경기지역 경선(권리당원 투표)과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최고위원 당선권 진입을 노리는 중위원 후보들의 경쟁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친명-비명 진영 간의 결집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최고위원 당선권 진입이 1% 내외의 차이로 엇갈리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대 최고위원 경선 구도는 친명(친 이재명) 주자들 모두 당선권에 진입시키려는 친명 진영과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를 지원하는 비명(비 이재명) 진영 간의 치열한 경쟁전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친명 진영에서는 누적득표율 5위인 박찬대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누적 득표율 공동 3위인 서영교-장경태 후보에 대한 측면 지지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즉, 비명 진영의 송갑석 후보에 대한 견제와 배

제 투표를 통해 친명 주자들 전원의 최고위원 진입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친명 주자 측은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적 지지 없이는 송갑석 후보에게 밀리게 된다"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친명 주자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만 도와 달라"며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서영교-장경태-박찬대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친명 주자 진영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나 과잉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맞서 호남 단일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후보는 최근 윤영찬 후보의 사퇴 및 지지 선언은 물론 비명 진영의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 득표율에서 6위인 송 후보는 3-5위 그룹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는 점에서 역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 86 운동권 진영, 친문(친 문재인) 진영은 물론 더미래, 민평련, 민주주의 4.0, 재선의원 그룹의 상당수가 송 후보 지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 측에서는 서울-경기지역 경선에서 친명 주자들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대의원 투표에서 대역전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친명 진정 체제 견제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대의원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친명과 비명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당 내외에서는 최고위원 당선권 진입이 1% 내외의 차이로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 경선 투표율과 함께 호남 대의원 표심과 친명-비명 진영의 결집력 등이 당선권 진입을 결정하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전남 섬 의료 지원 '병원선 3법' 발의

### 민주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은 24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김 의원이 직원들과 공모를 통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 최근 조사 결과 2차 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기소 시 당직 정지' 민주 당헌 개정안 부결

### 친명 체제 견제 '후폭풍'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친명 체제에 대한 견제 흐름이 예상 밖의 당헌 개정안 부결로 나타났다.

이른바 '개팔'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갑작스레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재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

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이날 개정안의 부결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 중심에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우선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

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팬덤을 앞세워 당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중앙위에서의 예상 밖 부결로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던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당헌 14조 2항)신설안은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당헌 80조) 개정안만 당무위(25일)와 중앙위(26일)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